

적폐청산위 “MB, 제2롯데월드 특혜 제공”

신경민 의원, “2008년 추산 비용 약 3290억원→집행된 액수 1270억원… 안보 저버린 이적행위”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6일 제2롯데월드 인허가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의 롯데그룹 특혜 제공에 대해 지적했다. 신경민 의원은 이날 10차 적폐청산위 회의에서 “이명박 정부가 제2롯데월드 인허가 과정에서 롯데 측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엄청난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2008년 조정방안에서 추산된 비용은 약 3,290억원이었으나 그해 말에 집행된 액수는 1,270억원으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KA-1 기지이전, 지형인식정보장치 장착 부문에서 당초 액수보다 많이 줄었다. 군사 공항 활주로에 백두산(제2롯데월드)을 쌓은 격이고 안보를 저버린 이적행위”라고 비판했다.

박근혜 위임장도 “공군은 공식적인 건축허가 신청이 있기도 전에 2008년 6~9월 테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애초 서편할 주로, 동편할 주로를 10도 트는 방안을 추진했는데 TF에서 난데없이 동편할 주로만 3도 트는 변경안을 제시했고 결국 채택됐다. 이는 1조 이상 롯데의 경비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편법이고 특혜였다”고 지적했다.

박 위임장은 “KA-1은 공군 통제 공격기로 성남 비행장에 있었으나 서해 5도를 침투하는 적의 특수부대를 요격하기 위한 공격기”라며 “그런데 제2롯데월드가 들어 서면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우려



손잡은 한-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확대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때문에 결국 원주기지로 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군은 이전부터 KA-1 기지이전

을 검토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단행된 적도, 구체화된 계획을 세운 적도 없었다”면서 “결과적으로 롯데라는 한 민간기업

의 숙원사업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안보와 안전을 맞바꾼 매국적 행위를 했다”고 일갈했다. /뉴스

전북도의회 정례회 개최… 다음 달 13일까지 일정

전라북도의회는 8일 제348회 정례회 개회식을 갖고 다음 달 13일까지 36일간의 일정에 들어간다.

올해 마지막 정례회 기간 동안 도의회는 도와 교육청의 2018년도 예산안 심사 및 2017년도 추경예산안,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조례안·동의안·건의안 등 32개 안건을 심의 처리한다.

9일부터 21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라북도와 전라북도 교육청, 산하 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금년 한 해 동안 행정정책 집행상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지적하고 대안도 제시한다.

이어, 23일부터 12월12일까지는 도와 교육청이 편성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다.

도의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위해 관련 자료에 대한 검토 분석을 마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연찬회를 갖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마친 상태다.

황 현 의장은 “이번 회기에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며 “올 한해 동안 이루어진 사업을 꼼꼼히 따지고 예산 또한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정효율성이 극대화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는 12월 13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 위원회에서 처리한 2018년 본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최종 처리하고 폐회한다. /김진성 기자

대표·원내대표 빠진 바른정당… “국민만 보겠다”

통합과 의원 9명이 탈당을 선언한 바른정당은 7일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부재한 상태에서 오전 회의를 했다. 일부 의원들의 추가 탈당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잔류를 택한 자강과 의원들은 ‘보수 혁신’을 강조하며 내부 결속에 주력했다.

바른정당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당대표 후보 연석회의를 가졌다. 공개적으로 탈당 의사를 밝힌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불참하며 회의는 당의 수장이 빠진 상태에서 진행됐다.

당대표 후보인 유승민 의원, 하태경 최고위원, 정문헌 전 사무총장과 권오을 최고위원, 진수희 최고위원, 유의동 의원 등은 비장한 표정으로 발언대 앞에 서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이혜훈 전 대표도 오랜만에 오전 회의에 모습을 나타냈다.

유 의원은 “저는 아직 당대표 후보 신분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야기는 많이 하지 않겠다”며 “단 당이 최대 위기에 처해있는 가운데 저희는 한 가지만 생각하겠다. 보수의 환골탈태를 바라는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내일 9명의 탈당계가 제출되고 당이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잃더라도 사무처 직원들과 그동안 정책을 위해 헌신한 아끼지 않은 전문위원들에게 동요하지 말고 같이 가자는 말씀을 드릴 것”이라며 “비공개 자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진 최고위원은 “바른정당이 창당된 뒤 하루하루가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없었지만 지금은 최대 위기에 봉착한 상황이고 아시아시피 곧 교섭단체 지위도 잃게 될 것”이라며 “경제적·재정적으로 어려워지는 건 허리띠를 졸라매며 버틸 수 있지만 국민들 사이에서 멀어져 우리가 하는 일이 잘 전달되지 않음을 불안하다”고 설명했다.

권 최고위원은 “예정대로 오는 13일 전당대회를 치를 것이다.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면 바른정당이 가고자 했던 목표를 다시 확인하고 당원동지, 지지자들과 마음을 모으는 행보를 시작할 것”이라며 “나라의 정치가 바로 갈 수 있도록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고 강조했다.

지난 6일 탈당을 선언한 통합과 의원 9명은 오는 8일 탈당계를 제출하고 9일 한국당에 복당할 계획이다. /뉴스

더불어민주당, ‘한샘 논란’에 직장 내 성폭력 근절방안 마련키로

더불어민주당은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직장 내 성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태연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한샘 여직원 성폭력 논란과 관련해 “이번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은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폭력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샘 사건은 한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발생했는데 이것은 회사 조치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회사가 조직적 회유와 압력을 가했다고 한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9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사업주에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해 법사위를 통과했다”며 “노동부, 여가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피해자 상담 및 구제절차 개선 방안을 포함해 직장 내 성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뉴스

김광수 의원, “아동·보육·어르신 예산 강조”

“보육교사 근무환경비,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 장애아보육료 등 예산 증액 촉구했다”

국회 김광수 국회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7일, 국회에서 열린 2018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 상정 전체회의에서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아동, 보육과 어르신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부서 예산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현재 어린이집의 경우 주 6일(1일 12시간) 이상 운영해야 하는 특성상 일상적인 초과근무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재정이 열악한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경우 초과근무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교사근무환경개선비’의 예산 부족분은 계속 누적되고, 매년 미지급분에 대해 차년도에 소급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예산확보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김 의원은 아동·보육교사를 위한 교사근무환경개선비에 대한 2018년도 예산 증액 및 보육교사 처우 개선에 대한 대책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또한, 2018년도 경로당 기능 강화의 일환

으로 시행하고 있는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 지원사업’은 그간 지방비 부담완화를 위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고 한시 지원했다는 이유로 2018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다.

김 의원은 국고 지원이 없어진다면 지자체가 모든 예산을 감당해야 해 부담 역시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예산부족으로 지원 받지 못하는 경로당이 늘어날 것을 지적하며, 정부의 인일한 예산편성 행태를 강력하게 질타했다.

또한, 경로당 양곡비 지원사업은 정부관외양곡 즉, 정부미만 구입해 지원할 수밖에 없어 일반미보다 수분 함유량이 낮아 밥맛이 떨어져 어르신들의 민원이 발생하는 바, 햅쌀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이날 안에 발의할 예정이다.

이어 김 의원은 치매안심센터의 신규필요인력을 충원하는 과정에서 지역별 여건에 따라 전문인력의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인력 1명당 치매환자

수의 지역별 편차를 고려해 치매관리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이밖에도 장애아동들에게 일정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표준보육비용 수준의 ‘장애아보육료 인상’, 지역아동센터의 기관운영비 지원이 열악해 종사자들의 처우와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현실화’를 요구하는 등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따른 아동·보육·어르신 관련 예산 증액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 의원은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발맞춰 민생과 밀접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살펴본 결과, 특히 보육교사 근무환경비,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 장애아보육료 등 관련예산이 낮게 편성되어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예산증액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정경보다는 오직 민생과 국민건강·생활을 위한 생산적인 정책 활동을 묵묵히 이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한국해상풍력(주)가 희망의 대장정을 시작하였습니다.

2016년 2월 정부가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한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60MW)의 해상공사를 2017년 5월에 착수하여 진행 중입니다.

- 환경친화적 공사시행
- 해상풍력수산업공존실증
- 지역 경제활성화 기여
- 국내해상풍력기술개발

- 청정 전력생산 및 온실가스 감축
 - 연간 175GWh생산, CO₂ 8만톤 감축
- 고부가가치 융복합 신산업 육성
 - 탄소섬유 117톤 적용 등 핵심 신소재 활용
- 조선·해양산업 활성화 기여
-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실증단계)
 - 건설시 500명/3년, 운영시 50명/20년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해상발전소

추진경과

- 2010년 11월 정부 해상풍력추진 로드맵 발표
- 2011년 11월 서남해 해상풍력 개발협약 체결 (정부, 전라남도, 9개 사업추진기관)
- 2015년 10월 EPC 계약체결 (터빈 및 기초: 두중, 현대건설, 계통연계설비: 한전)
- 2016년 2월 전원개발사업 승인(산업통상자원부)
- 2017년 5월 해상발전소 해상설치공사 착수

국내 해상풍력산업의 글로벌경쟁력 확보

[2단계(시범단지)는 400MW로 국내해상풍력기를 대상으로 개발 예정]

Homepage : <http://www.kowp.co.kr>